

“투기과열지구 연장 지방죽이기”

지역 건설 부동산업계 강력 반발 경기침체 외면 처사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 연장키로 하자 대구·경북지역 건설·부동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18일 도입해 오는 4월18일 종료할 예정이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오는 2012년 4월18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나온 반응이다.

이에따라 대구 등 5대 광역시와 서울, 충북, 충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교부가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된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해온 건설·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건교부의 방침에 “지방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대구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히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할 상황인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와 대구시의 입장이다.

건설업계와 대구시는 잇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교부에 요청했지만 건교부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오는 4월18일 자동적으로 해제되기를 기대해 왔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와 한국주택협회 대구시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수도권·충청권 등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할 규제를 지방 도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건교부가 내달 6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개정법안에 대한 의견접수기간 동안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에 대해 정책을 차등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정을 외면한채 제도를 연장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우성문기자
smwoo@idaegu.com